

최근 중국경제 형세분석, 향후전망 및 정책동향

2013년 제4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최근 중국경제 형세 분석과 하반기 전망 및 정책동향
2. 일 시 : 2013. 8. 29(목) 16:00~18:00
3. 발표자 : 국가신식중심 경제예측부 판젠핑(范剑平)

1.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형세

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인 잠재성장을

□ 금년 상반기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대비 7.6% 성장하였음.

- 그 중 1/4분기와 2/4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7.7%와 7.5%를 기록하여, 연속 5개 분기의 경제성장률이 7.4%~7.9% 구간에 포함되면서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됨.
- 이러한 성장속도는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중국 경제성장의 잠재 능력에도 부합하는 비교적 합리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음.

□ 잠재 성장률은 국내 각종 생산요소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가정할 때, 사회 총수요-공급의 관계가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경제성장 속도를 말함.

- 중국의 경제총량은 이미 50조 위안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1%의 성장률을 실현하려고 해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의 고속 성장을 거친 중국은 현재 구조전환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노동력, 토지, 시장 등 요소들에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음.
- 동일한 투입 하에서는 기술상 혁신적 발전이 없을 경우, 투입에 따른 생산의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잠재 생산성이 하락하게 됨.

□ 학계의 예측에 따르면, "12.5"기간 중국의 잠재 성장률 구간은 7~9%임.

- 1~7월 사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대비 2.4%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수준은 연도 목표(3.5%) 이내에 있음.
- 취업 관련 지표도 안정적인.
 - 상반기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는 725만 명으로 동기대비 31만 명 증가하였고 전년 계획의 80.6%를 완성하였음.
 - 2/4분기 말 도시등록실업률은 4.1%로 1/4분기 및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나. 3대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서비스업 비중의 상승

□ 상반기 1차 산업은 동기대비 3% 증가하고 농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음.

□ 2차 산업과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가 각각 7.6%와 9.3% 증가하였음.

-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의 8.3%와 10.5%보다 어느 정도 하락하였지만 발전추이를 보면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폭 하락하지는 않았음.
- 7월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의 실질 증가율은 9.7%로 6월 대비 0.8%p 상승하였고, 자동차 제조업 부가가치의 동기대비 증가속도는 14.1%로 6월 대비 3.5%p 상승하였음.

□ 상반기 3차산업의 증가속도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거듭하였으며, 동기대비 증가율은 2차산업보

다 0.7%p 높은 8.3%를 이루었음.

- 상반기 3차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45.3%로 지난해보다 0.7%p 상승함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의 성공적 지표로 부각되었음.

다. 3대 수요와 국내외 수요의 증가세

□ 1-7월 사이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2조 9,27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음.

- 가격이 대폭 하락한 요인을 제외하면 소비품 소매액의 실질증가폭은 지난해 동기대비 약간 높은 수준임.
- 특히 일부 새로운 소비 유형과 소비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었음.
 - 상반기 인터넷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70%에 육박하였고 전자상거래 총액은 4조 9,80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정보소비(信息消費) 규모는 20.7% 증가한 2조 700억 위안에 달하였음.
- 1-7월 사이 고정자산투자는 동기대비 20.1% 증가하였음.
 - 그 중 민간투자는 23.3% 증가하였고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2.3%p 상승한 63.7%에 달하였음.
- 1-7월 사이 수출입 총액은 동기대비 8.5% 증가하였고, 그 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9.5%와 5.3% 증가하였음.
 - 가격요인을 감안할 경우, 수출입 증가속도와 GDP 증가속도는 대체적으로 일치하였고 국내외 수요도 비교적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었음.
- 상반기 최종 소비의 GDP 기여도는 45.2%로 3.4%p의 GDP 성장률을 견인하였고, 총 자본형성의 GDP 기여도는 53.9%로 4.1%p, 상품과 서비스 순수출의 GDP 기여도는 0.9%로 0.1%p의 GDP 성장률을 각각 견인하였음.

2. 식량생산, 구조조정, 체제개혁, 민생개선의 진전

가. 농업생산, 특히 식량생산의 호전

□ 여름철 식량과 식용유가 풍작을 이루었음.

- 전국 여름철 식량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9억 근 증가한 2,638억 근을 기록하였고, 여름철 유채씨 생산량도 지속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45만 톤 증가하였음.
- 올벼(早稻)도 풍작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가을철 작물도 작황이 좋음.
- 농업생산, 특히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은 전반적인 가격수준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성장, 구조조정, 개혁축진을 위한 주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산업 구조조정의 안정적 진전

□ 생산과잉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였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생산과잉이 심각한 산업의 맹목적인 확장 억제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음.
- 생산과잉이 심각한 산업의 신규 생산 프로젝트 허가를 엄격히 단속하고, 생산과잉이 심각한 산업에서 법규를 위반한 재건축중인 프로젝트를 단호하게 정지시켰으며, 각지의 관련 부서에서 생산과잉이 심각한 산업의 현황을 정리하도록 하였음.
- 현재 과잉생산을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 방안을 작성 중에 있음.

□ 첨단과학기술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 상반기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대비 11.6% 증가하여 전체 공업보다 2.3%p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환경보호 기술 장비, 차세대 이동통신, 선진 의료설비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주요업무 수입의 증가속도는 전체 공업의 2배에 달하였고 태양광 설비, 풍력발전 설비도 지난해 연말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탈바꿈하였음.

□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축을 추진하였음.

-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유황, 암모니아질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감소하였음.

다. 경제체제 개혁 가속화

□ 올해 들어서서 일부 중점영역의 개혁이 새로운 진척을 가져왔음.

- 국무원은 이미 183가지 행정 심사허가 사항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하였고 아울러 "민간투자 36조" 및 42항 실시세칙의 집행현황에 대해 제3차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정부 허가 투자 프로젝트 목록(政府核准投资项目目录)도 수정하여 보고하였음.
- 자원류 제품 가격개혁에 있어, 원유 가격형성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실시하고 非 주 민용 천연가스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전력가격 분류구조의 조정과 규범화 및 원자 력 발전 on-grid 전력가격 메커니즘의 완비 등을 위한 개혁방안을 실시하였고, 탈질 (脱硝) 전력가격 정책 시범지역을 14개 성(省)에서 전국으로 확장시켰음.
- 그 외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영업세 개혁" 시범은 8월 1일부터 전국 에서 추진되었고, 철도 운수와 우편통신 등 산업도 적절한 시기에 시범범위에 추가 될 것임.
- 아울러 금융관련 경제 구조조정과 전환에 대한 정책조치도 시행되었음.
 - 일례로 7월 20일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이는 금리 의 시장화 개혁에서 중대한 발전을 가져온 것임.
- 한편, 종합적 개혁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 국무원은 헤이룽장(黑龙江)에서 현대 농업 종합 개혁시범을 추진하도록 신규 비준 하였음.
 - 또한 중국(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가 실시되었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역시 선전(深圳)에서 시작되었음.

라. 민생의 지속적 개선

- 소득분배 제도개혁 심화와 관련된 약간의 의견이 발표 및 실시되었고 관련 방안과 실시세칙은 검토 중에 있음.
- 상반기 농촌주민 일인당 현금소득은 실질적으로 동기대비 9.2% 증가하여 경제성장 률을 상회하였고, 도시주민보다 2.7%p 더 높았음.
 - 상반기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2.83:1로 지난해 동기대비 0.08 축소되었음.

- 기본 약물제도와 기층 운영의 메커니즘 완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현금 병원에 대한 종합개혁 시범범위를 1,000여 개로 확대시켰음.
- 기업소유제 개혁 및 국유 문예단(文藝團) 개혁 발전 지원 관련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식품약품안전 감독관리 체제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음.
- 상반기 전국 재정수입, 특히 중앙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대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지출은 감소되지 않았고 기본 공공서비스도 보장되었음.
 - 의무교육 학교 표준화 구축 추진을 가속화하고 농촌 빈곤지역의 고등교육 위탁 교육생 모집인원을 증가하였음.
 - 또한 사회보험 범위를 계속하여 확대하였고, 신형 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의 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금 기준을 일인당 연 240위안에서 280위안으로 상향조정함.
 - 연속 9년간 기업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하여 일인당 월 양로금이 약 1,900 위안에 달하였음.
 - 보장성 주택공사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236만 채가 건설되었고, 신규 착공수가 440만 채에 달하였음.
- 전반적으로 올해 국제경제 환경이 복잡하고 국내 경제성장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어렵게 이루어진 이러한 성과들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력한 여건이 조성되었음.

3. 중국경제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과 기회

가. 국내외 경제 환경의 심각성

- 국제적인 차원에서 올해 들어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속 회복세를 보이고 선진 경제도 긍정적인 조짐을 보였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은 여전히 우여곡절이 많고 불확실성이 비교적 큼.

□ 국내 차원에서도 경제성장 중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 등 문제점이 여전히 심각할 뿐 아니라 경제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모순과 문제점이 대두되었음.

- 미약한 경제성장 동력

- 국제 시장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아 해외수요 안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보편적인 상황은 ▲ 고객사의 오더주문 의향이 미약하고, ▲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 위안화 환율의 절상이 비교적 빠르고, ▲ 전통적인 경쟁우위가 약화되어 하반기 수출형세가 낙관적이지 못함.
- 국내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기반 역시 탄탄하지 못하며, 비록 투자 증가속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지만 ▲ 정부투자는 재정수입 증가속도 하락의 제약을 받고 있고, ▲ 기업 역시 성과 부진 예측과 적절한 투자처의 결여로 인해 투자의 향이 강하지 못함.
- 소비확대 역시 비교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 기존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속도가 더디고, ▲ 사회보험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소비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또한 생활 기본 소비 패턴의 고도화에 대한 장애 요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안전 문제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향후 소비의 증가속도가 향상될 여지도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됨.

-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

- 현재 적지 않은 산업에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났지만 생산력 이용률은 70% 내외에 불과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음.
- 아울러 막대한 건축중 및 건축계획중인 생산력의 규모로 인해 생산과잉 문제가 더 심각해질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생산과잉 문제는 기업의 재고해소와 성과개선에 상당한 압박을 가져다주었음.
- 1-7월 공업생산자 공장출하가격은 동기대비 평균 2.2% 하락하였고 공업생산자 구입가격은 동기대비 2.3% 하락하였음.
- 생산영역의 가격하락은 중국 전통 제조업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보여줌.
-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된 상황에서 생산과잉 문제의 해결은 성장, 소득, 채무, 자산, 인력배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기업의 생산 경영난 격화

- 융자난, 높은 융자비용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기업, 특히 마소형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 문제임.

- 국가통계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융자수요가 있는 마소형 기업 중 불과 37.1%만이 은행으로부터 일부 혹은 전액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평균 연 이자율이 약 7.25%였음.
- 따라서 적지 않은 기업은 민간대출에 의존하는데 평균 월이자율이 약 1.75% 수준으로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0% 이상에 달함.
- 이와 동시에 기업의 노동자, 토지, 유통비용도 상승하여, 상반기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매 100위안 당 주요업무 수입 중 원가가 차지하는 금액이 85.63위안(융자비용 불포함)으로 나타났음.
- 공업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이미 연속 17개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음.
- 원가상승과 가격하락의 동시적인 압박 하에 적지 않은 기업은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수입이 증가하지 않거나 수입이 증가하지만 이윤이 증가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 증가속도는 1-2월의 17.2%에서 그전 6개월의 11.1%로 하락하였음.

- 재정금융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인한 리스크 방지의 복잡성 증대

- 상반기 전국 재정수입은 7.5% 증가하였는데 그중 중앙 재정수입이 1.5%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비교적 큰 압박을 받고 있음.
- 채무 연체 리스크도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방은 신규 채무를 통해 구 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음.
- 금융영역이 직면한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
- 기존 투자는 주로 인프라시설과 부동산투자에 의해 증가하였고, 관련 자금은 대체로 고비용의 융자를 통한 것이어서 "단기금융의 장기대출", "단기대출의 장기사용"이 지나치게 급속하게 확대되었음.
- 아울러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와 은행업 리스크 방지 및 적극적인 해결이 비교적 큰 도전에 직면하였음.

- 환경문제의 부각

- 대기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중점구역의 수질오염이 전면적으로 통제되지 못하였으며, 토지오염 또한 비교적 심각한 상황임.
- 돌발적인 환경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

며, 각종 오염문제 또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나. 경제환경의 긍정적인 요인과 유리한 여건

- 현재 중국은 각각 다른 지역, 산업, 업종, 기업별로 상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일부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능동적으로 형세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가속화하여 비교적 강한 리스크 대응능력을 갖추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중부지역은 하락세가 완화되었으며, 서부지역은 하락세가 현저하고 동북지역은 성장둔화 우려가 있음.
 - 동부지역은 경제총량이 크고 개방수준이 높아 외부충격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일찍 받았지만, 구조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빠르게 진전된 것에 힘입어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 경제 성장속도는 안정적으로 상승하였으며, ▲ 전국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음.
 -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성장속도는 여전히 동부지역보다 빠르지만, 자원요소, 성장 펜더멘털과 기존 산업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 직면한 경제전환의 압박 역시 증대되었고, ▲ 모순과 어려움도 더 복잡함.
 - 하지만 많은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특색 우위산업을 육성하고 다원화 성장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 일정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산업 차원에서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식량이 계속하여 풍작을 이루어 안정적인 경제와 물가를 위해 좋은 기반을 마련하였음.
 - 2차 산업의 증가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된 반면, 첨단기술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이 호조를 보였고, 에너지 고소비산업의 증가속도가 하락하였음.
 - 3차 산업의 증가속도는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일부 신흥산업과 신행 업종이 빠르게 발전하였음.
 - 예컨대 상반기 전자상 거래액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 차원에서 주민소비와 관련된 업종은 투지와 관련된 업종보다 더 많이 성장하였음.
 - 철강, 비철금속 등 업종이 어려움을 겪은 반면에 의약, 식품, 자동차, 컴퓨터 등 업종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예컨대 상반기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동기대비 각각 12.83%와 12.34% 증가하여 증가속도는 지난해 동기대비보다 8.75%p와 9.41%p 높았으며, 통신설비, 의료기기 등 신홍산업의 증가속도는 전체 공업 부가가치 증가 속도의 2배 이상에 달하였음.

- 기업 차원에서는 시장이 긴축된 여건 하에서 적지 않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었지만 일부 기업은 시장의 부도장치(倒逼机制)¹⁾ 역할에 힘입어 R&D 투자확대와 제품 구조조정의 가속화 및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뛰어난 기업성과를 이루었음.
 - ▲ 건축자재업 중에서 에너지 저소비와 심가공 제품을 중시한 기업은 경영상황이 현저하게 호전되었고, ▲ 기계장비업 중에서 탁월한 혁신능력과 차별성있는 제품을 확보한 기업은 생산경영 전망이 비교적 낙관적이며, ▲ 섬유업 중에서 기업내부의 원가관리와 국내시장 개척을 중시한 기업은 보편적으로 양호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일부 민간기업은 능동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조정을 가속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하여 비교적 좋은 경영성과를 이루었음.
 - 상반기 규모이상 사기업의 총 이윤액은 15.8% 증가한 7,999억 4천만 위안으로 전체 공업보다 4.7%p 높았음.

-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 중국의 경제성장은 펜더멘털이 양호하고 중점적인 개혁을 강화하고 있으며, ▲ 시장잠재력이 점차 발휘되고 기업의 리스크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 구조조정의 추진 및 구조전환과 고도화도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이는 당중앙 국무원에서 출범한 각종 정책이 적시에 발표되었고, 과학적이며,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노력 여하에 따라 올해 경제사회의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이 직면한 극히 복잡한 상황은 근래에 보기 드문 경우임을

1) 국유기업에서 자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신용능력을 활용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

인식해야 함.

- 국내/해외, 장기/단기, 구조적/주기적 요인이 결합되어 유리한 여건과 불리한 요인이 병존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있지만 하락할 압박도 동시에 받고 있음.
- ▲ 경제성장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리수로 넘어가는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며, ▲ 안정적인 예측을 하며, ▲ 적절히 정책을 조정하고, ▲ 리스크 대비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 각종 복잡한 어려움에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하여 이번 대조정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핵심적인 시점을 확보해야 함.
- 아울러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구조개선, 시스템 고도화 속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4.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가. 금년 하반기-2015년 경제성장률 예상: 7% 내외

- 7월 경제성장 속도는 6월보다 가속화되어 제일 어려운 고비는 이미 넘긴 것으로 보임.
- 7월의 공업 성장속도는 6월보다 0.8%p 상승하였음.
- 제조업 PM I지수는 HSBC나 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8월에 모두 50%를 상회하였음.
- 특히 HSBC PMI의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연속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8월에 급등세를 보였음.
- 자동차 제조업 부가가치에 있어, 7월 증가율은 14.1%로 6월 대비 3.5%p 상승하였음.
- 철강산업은 7월 증가율 10.9%로 6월 대비 3.7%p 상승하였음.
- 대외수출은 6월에 3.1% 하락하였지만 7월에는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음. 이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6월 이후에 정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나. 금년 하반기-2015년 경제성장의 핵심 분야 : 부동산

□ 중국의 부동산은 도시별로 각각 다른 현상이 나타났음.

- 1, 2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지만, 일부 3, 4선 도시는 상승이 아닌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중국경제는 경착륙하게 되고 경제둔화 가능성이 증대될 것임.

□ 도시별로 상이한 부동산 가격추세가 나타난 주요원인

-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노동자와 인구의 이동
 -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공업화는 후기 단계에 들어섰음.
 - 중국의 공업성장속도는 여전히 비교적 빠르지만, 제조업에 따른 고용창출은 제한적임. 동부지역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중서부지역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년 전국적으로 제조업에 의한 신규 고용창출은 상당히 적음.
- 과거 제조업 위주에서 최근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창출로 전환
 - 1, 2선 도시의 서비스업이 가장 빨리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3, 4선 도시는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워짐.
- 기존 중국의 행정시스템 역시 1, 2선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였음.
 - 중앙정부는 가장 우수한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대도시에 제공하고 지방정부 역시 성회도시에 가장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즉 주민을 위한 우수한 공공서비스는 모두 1, 2선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 의료 등에 있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

□ 중국의 부동산조정 정책은 인구가 1, 2선 도시로 유입되는 경제현상에 부합하지 않음.

- 토지양도(出讓) 지표를 원래 호적에 따라 평가함.
 - 인구유출이 심한 3, 4선 도시는 많은 토지양도 지표를 확보하여 대량의 부동산을 건설하였지만, 그 결과 부동산 과잉공급이 초래되어 거대한 유령도시가 나타났음.

- 내몽고 어얼뒤스(鄂尔多斯)시의 부동산 공급량은 수요량의 4.9배이고, 산시성 다퉁(山西省大同)은 5.7배이며, 간수 우웨이(甘肃武威)는 8배에 달하였음.
- 즉, 일부 3, 4선 도시의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이 극심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음.
- 반면에 인구가 대량 유입된 1, 2선 도시는 부동산 공급부족과 개발상들의 쟁탈전으로 인해 토지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의 부동산 공급량은 수요량의 64%에 불과함.
- 특히 베이징의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공급량도 많이 부족한 상황임.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7%가 정상적인 수준이지만, 베이징은 4%에 불과하여 공급량이 훨씬 부족하며, 이로 인해 임대료도 높음.

□ 이러한 지역별로 상이한 부동산 상황으로 인해, 2013~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7~8%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5. 중국 경제성장의 신성장동력 육성

가. 서비스업의 중점적 육성

- 중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과잉현상이 극심하지만, 서비스업에는 아직 과잉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 예컨대 베이징은 공기오염이 악화됨으로 인해 실내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훈련장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음.
 - 지난 2년간 베이징에서 영화산업 등 서비스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던 것처럼, 헬스장, 수영장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인터넷쇼핑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함.

- 올 상반기 인터넷쇼핑 거래액은 70% 증가하였음.
 - 일반 백화점은 높은 상가 임대료로 인해 상품가격이 상당히 높으며, 일반 주민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음.
- 2년 전 40%인 인터넷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70% 증가하였음.
- 인터넷쇼핑의 빠른 발전은 스마트폰의 사용의 보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올 상반기 기업의 전자상 거래액과 일반주민의 인터넷 쇼핑액은 각각 5조 위안과 2조 위안에 달하였음.
- 현재 중국정부는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4G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서비스업의 중점사업인 양로 관련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2023년이 되면, 중국은 본격적으로 노령화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지만, 현재 중국은 양로와 관련된 준비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함.
 - 양로원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로를 위한 사회의 기본서비스도 부족한 상황
 - 향후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중국은 양로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함.

나. 도시화와 1, 2선 도시 부동산의 중점적 육성

□ 신형 도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도시군(城市群)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
 - 예컨대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와 근처의 작은 도시를 하나로 통합화하여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것임.
 - 향후 중국의 1, 2선 도시는 모두 이런 도시군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1, 2선 도시와 신형 도시화 전략을 결합시켜 추진해야 함.

다. 도시 인프라시설의 중점적 건설

□ 과거에는 생산과 산업을 위한 인프라시설을 건설했다면, 현재로서는 주민소비를 위한 인프라시설을 건설해야 함.

- 지하철, 음용 가능한 수돗물, 주차장, 스마트 교통 등 도시 인프라시설을 건설해야 함.
- 해당 분야에 아직 많은 투자기회가 있으며, 소비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라. 현대 제조업의 증점적 육성

□ 전통적인 제조업은 생산과잉 현상이 부각됨.

- 노동집약형 산업과 철강, 시멘트 등 자원집약형 산업에 과잉현상이 나타났음.

□ 자동화, 스마트화와 관련된 현대 제조업이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은 기계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산업의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함.
- 예컨대 정밀기기 산업, 로봇산업 등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임.

6.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변화

가. 정부주도의 개혁에서 기업주도로 전환

□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큼.

-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각종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정하였으며, 산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간섭함.
- 예컨대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정책, 태양광과 신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등 일련의 정책조치를 취하였음.

- 그 결과 불과 4년 사이에 발전전망이 좋은 태양광산업을 과잉산업으로 전락시켰으며, 인구이동의 경제법칙을 지키지 않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의 실시 등으로 인해 1, 2선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기는 커녕 계속하여 상승하였음.

나. 정부주도에서 기업주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변화

-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조치를 통해 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 정부의 행정심사 간소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차단해야 함.
 - 중국의 새 지도부는 최소 1/3의 행정 심사허가 절차를 취소하여 기업의 자체 결정을 위해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할 예정임.
- 거시메커니즘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여건을 제공해야 함.
 - 합리적인 통화 공급량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금리 시장화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재원조달과 비교적 낮은 자금조달 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환율 시장화와 위안화 자유태환을 추진해야 함.
 - 올 연말에 위안화 자유태환 관련 방안의 제정을 마감하고 향후 2년 사이에 위안화 자유태환 관련 개혁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 환율 형성메커니즘도 점차 시장화로 조정될 것이고 변동환율제 형성을 통해 기업의 환율에 따른 원가를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됨.

<질의·응답>

질문 1.

향후 몇 년 간의 경제 잠재성장률은 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이는 과거의 10%보다 하락한 수준임. 그 계산방법과 주요 하락요인은 무엇인가?

답변 1.

잠재 성장률의 계산은 주로 수학 모형과 솔로 성장모형(Solow Growth Model)을 적용함. 즉 노동력, 토지와 자연자원, 자금, 기술, 관리 등 경제성장의 5대 요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계산함.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경제 잠재성장에 대한 기여가 가장 많이 하락한 요인은 바로 노동력임. 2012년부터 중국의 노동력은 증가하기는커녕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 한 해만 345만 명의 노동자가 줄어들었음. 올해는 그 감소폭이 50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매년 1,000만 명의 노동자가 증가하던 과거에서 현재는 매년 500만 명 감소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노동비용도 급격히 상승할 것인데, 만약 기술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노동자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보완하지 못하게 됨. 즉 현재 중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의 감소라고 할 수 있음.

과거 상당 기간동안 중국에 대한 외지는 연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음. 하지만 2012년 외자유치 규모는 3.7% 하락하였고 올해는 거의 제로 성장한 상황임. 그 중 중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0% 하락하였음. 매년 외자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인 것으로 알려졌음.

질문 2.

IMF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에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도시가 포함되며, 이러한 도시의 주택가격은 가처분소득의 23배인 것으로 알려졌음.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소득의 6배를 머물로 보는데, 23배나 되는 이러한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2.

중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음. 중국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움. 베이징의 경우, 일인당 소득만 살펴보면 부동산의 판매난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을 것임. 사실상 중국의 소득계산은 추출조사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는 소득이 10,000원일지라도 3,000위안으로 낮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소득은 통계국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베이징

의 경우, 외지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특히 전국의 많은 부자들이 베이징에서 대량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베이징의 소득수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임. 베이징의 부동산판매가 원활하고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중국의 소득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로 한 개 도시 주택가격의 합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전 세계 대부분 도시에 적용하지만 런던, 뉴욕, 과거의 도쿄 등 국제화 대도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즉 이러한 도시 역시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6배 기준으로 부동산시장의 버블을 판단해서는 안 됨.

따라서 중국정부, 특히 상하이나 베이징 등 대도시 정부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 최소 40% 이상의 주민을 위해 보장성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가 싱가포르처럼 60%의 도시인구를 위해 보장성주택을 공급할 경우, 해당 도시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대다수 주민과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고, 국내외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시장이 될 것임. 아울러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국제화 대도시로 점점 더 많은 글로벌인재를 유치할 것임.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더 많은 보장성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임. 이는 바로 과거 중국정부가 범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음.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국제화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중국의 일반도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임. 향후 몇 년간 이런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에 하락세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5~10년 사이에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수도를 베이징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지 않는 이상 베이징의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기 어려움.

질문 3.

향후 신성장동력을 육성함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구조전환에서 기업이 주요 추진자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 중국은 에너지, 통신 등 산업에서 국유기업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외수출에 있어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유기업의 경우 상장회사라 할지라도 수익권은 정부소유이고 공산당에

서 인사권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음. 혹시 기업이 주요 추진자로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수익권이나 인사권 행사를 멈추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는가? 아님 민간기업의 비중을 좀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뜻인가?

답변 3.

중국의 개혁에 있어서 기업을 추진자로 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업이란 민간기업, 국유기업, 외자기업 등 형태의 기업을 총칭한 것임.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진 이런 기업들은 모두 공평하게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 물론 과거 중국의 독점산업에서 국유기업은 정책에 힘입어 우위를 확보하였음. 따라서 현재 추진해야 할 개혁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국민대우로 바꾸는 것임.

최근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투자 자유화라고 할 수 있음. 즉 동 시범구 내에서는 중국의 일부 법률을 적용하지 않게 될 것임. 과거 중국은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서는 안 되었”지만, 동 시범구에서는 “정부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특징으로 함.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하며, 시범범위를 더 확대시키기를 희망함. 동 시범구의 시행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경제특구에 해당되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진척을 가져오기를 바램.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4건의 중국 법률 적용을 폐지시켰는데 그 중 3건이 외자기업과 관련된 법률임. 동 시범구의 외자기업은 중국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기업등록 신고, 운영 등에서 외자기업으로서 그 어떠한 특별대우도 받지 않게 되고 중국기업과 다른 특수한 우대나 감독관리를 받지 않게 됨. 즉 동 시범구에서 외자기업은 100% 국민대우를 받게 될 것임.

질문 4.

중국정부에서 소비주도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노동비용의 상승이 모순되는가? 혹은 이미 극복 방안이 있는가?

답변 4.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에는 ① 주민소득의 증가속도가 GDP 성장속도와 일치하고, ② 노동비용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한 2가지 원칙이 있음. 즉 중국정부는 노동비용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더 높아 임금상승이 기업의 수익을 모두 잠식하는 결과를 원하지 않으며, GDP성장률보다 더 높은 급격한 주민소득 상승으로부터 초래될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공동화를 원하지 않음. 최근 몇 년간을 살펴보면, 중국은 주민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GDP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예컨대 2011년은 GDP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2년은 GDP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3년 상반기는 GDP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음. 노동비용의 인상과 노동생산성 상승은 기술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즉 노동비용이 대폭 상승한 대다수는 기술함량이 높은 고급기술자이고 보통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여전히 제한적임.

질문 5.

도시화를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라고 하셨는데 일부에서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즉 몸이 좋으면 얼굴빛이 좋지만, 얼굴빛이 좋은 것만으로는 몸이 좋다고 말할 수 없듯이 도시화가 성장의 동력인 것이 아니라 질 좋은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 질적인 도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음. 특히 인구비율로 정의하는 도시화의 경우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주장이 많음.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질문 5.

중국은 현재 2가지 현상이 병존함. 3, 4선 도시는 인구가 유출하고 기업유치가 어려워져 고용창출 기회가 적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 대량의 공실(空室)이 나타났음. 예컨대 베이징과 톈진 사이에 京津 신도시가 있는데 호화로운 별장들을 건설하였지만 부근에 취업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극히 적은 상황임. 그 외 허베이 차오페이톈(河北曹妃甸)은 석유화학기업과 철강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임. 현지 지방정부에서 그 곳에 대량의 부동산을 건설하였는데 오염심각 등 원인으로 인해 부동산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은행의 부실채무만

늘어났음. 따라서 취업기회가 없고 경제성장과 유리된 도시화는 결론적으로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함.

반면에 최근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환발해 등 전통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청두 등 일부 서부 도시는 성공적인 기업유치, 특히 다국적기업 등 외자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에 성공적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 이런 질적인 경제성장을 잘 활용하여 도시화를 추진한다면 도시화를 위한 경제우위를 충분히 활용하게 된 것임. 즉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도시화는 전국 모든 지방에서 모두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10여개 국가급 도시군(城市群)을 선정하여 도시화를 건설하는 것임. 향후 중국 절반이상의 인구는 해당 10여개 도시군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그 외의 기타 작은 도시는 농업을 위주로 추진할 것임. 즉 산업의 집중과 중점적인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임. 현재 도시화발전과 관련된 규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11월에 개최될 18차 3중전회가 개최되고 나서야 신형 도시화 추진과 소득분배 개혁, 부동산세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정책의 진공시기라고 할 수 있음.